

공단주변 주민의 환경태도와 환경운동* -울산과 여수에서의 이주요구를 중심으로

한상진
사회과학부 사회학전공

<요 약>

이 글은 울산과 여수의 공단 특성과 환경악화 정도, 초기 이주사업 과정 등을 살피고 공단주변 주민의 일반적 특성, 환경의식과 일상적 환경행동을 비교함으로써 이주요구운동의 배경을 고찰한다. 그런 다음 울산공단, 여천공단 주변 주민의 환경운동 참여도와 이주사업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초기의 이주사업과 차별화되는 현 단계 이주요구 운동의 논리를 조명하고 있다. 분석의 결과 울산공단과 여천공단의 주민들은 환경정의 가치관에 가장 친화적이며, 추가비용이 드는 무공해 농산물의 소비보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일상적 환경행동을 좀더 많이 실천하고 있다. 이주요구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 이주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여천공단 주변 주민의 의지가 비교적 강한 편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도시 전체의 총량적 환경악화가 불가피한 잘못된 이주정책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현 상태 삶의 질 개선을 아울러 중시하는 울산 주민의 태도도 높히 평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수에서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고용대책과 기업부담 강화의 요구는 법적 근거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해 온 이주사업의 근본적 개선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environmental attitude and the environmental movement of residents near the industrial complexes - Focusing on the relocation demands in Ulsan and Yosu

Sangjin Hahn
Professor of Sociology

* 본 연구는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중점영역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여천공단 주변지역 조사에 도움을 주신 여수환경운동연합 박계성 사무국장, 부산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정현민 선생께 감사한다.

<Abstracts>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for the relocation of the polluted area residents near the Ulsan and Yosu industrial complexes.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residents in those areas prefer the 'environmental justice' viewpoint and the recycling practice to other environmental values and behaviors such as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paradigm and the consumption of pollution-free vegetables. Around the relocation issues, we can find that demands for the new relocation site are stronger in Yosu than in Ulsan. However,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location policy which may result in the overall degradation of the environments, it is necessary to underline the attitudes of residents in Ulsan which emphasize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in their residential areas.

1. 문제의 제기

한때 석유화학공단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와 휘황찬란한 야경이 국가에 희망과 발전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움으로 찬양된 적이 있었다. 이제 세기가 바뀌어 탈근대의 정보주의가 득세하게 된 지금,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울산의 공업탑은 교통체증 때문에 철거 위기에 처해 있고 여수의 공단주변에는 '아름다운 야경 불빛, 알고 보니 죽음의 불빛'이라는 현수막이 휘날리게 되었다.

새로운 세기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생태담론'이 좀더 튼튼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산업주의의 그늘에서 환경피해를 겪어 온 공업도시 시민의 의식과 행동에 좀더 눈길을 둘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속 불가능한 삶의 조건에 처해있는 이들이 환경운동의 대의 아래 조직화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다. 그런 흐름에서 여기서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석유화학단지를 끼고 있는 울산과 여수의 공단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집단이주¹⁾ 요구를 둘러싼 환경운동의 배경과 동학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생태사회의 구축을 위한 환경운동 형태들에는 전문환경운동과 생태공동체운동 말고도 환경피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환경정의운동(environmental justice movement)'이 포함된다(정준금 외, 1999). 이 운동 형태는 환경악화가 구조적 불평등에 의해 사회적, 공간적으로 차별화되기 때문에 사회정의의 실현 없이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함축한다. 그런데 환경정의의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한 많은 주민환경운동은 지역이기주의로 매도되기도 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지역의 생태적 이익을 어떻게 전체 사회적으로 실현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고 하겠다(이득연, 1998). 이 글의 목적 또한 일회성 피해보상운동에 그치지 쉬운 환경정의운동의 지속 가능한 연대를 위해, 공단주변 주민이 지향하는 환경태도와 이주요구 운동의 공통된 특징들과 역사적 차원을 부각시키는 데 있다.

지금까지 울산과 여수의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들로는 이창걸(1996), 한상진(1996), 조태진(1996), 조길환 외(1998), 김재홍 외(1999) 등이 이루어져 왔다. 먼저 이창걸(1996)은 울

1) 이후 이 글에서의 이주(요구)라는 표현은 집단이주(요구)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산, 포항, 여천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공해피해와 이주대책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공단주변의 환경오염 실태를 사회학적으로 검토했다는 의의를 지니지만, 환경피해에 따른 이주문제를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보상금 지급, 공무원 비리 등의 파생적 차원으로 국한시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상진(1996), 조태진(1996)은 각각 울산과 여수의 공단 환경문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여 새로운 전략을 전망하고 있으나, 그간의 전개과정을 기술하고 있을 뿐 좀더 분석적이고 입체적인 탐구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조길환·김영곤(1998)과 김재홍 외(1999)의 경우 여천공단과 울산공단의 이주문제를 본격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 이 역시 주민환경운동의 문제의식보다는 정책적 관심에 치우쳐 있다.

이 글은 양 지역의 공단 특성과 환경악화 정도, 초기 이주사업 과정 등을 살피고 공단주변 주민의 일반적 특성, 환경의식과 일상적 환경행동을 비교함으로써 울산과 여수에서의 이주요구 운동의 배경을 파악한다. 그런 다음 울산공단²⁾, 여천공단 주변 주민의 환경운동 참여도와 이주사업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초기의 이주사업과 차별화되는 현 단계 이주요구 운동의 논리를 조명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사용된 자료는 601사례의 설문조사 결과인데, 두 가지 출처에서 얻어진 것이다. 하나는 김재홍 외(1999)가 연구의 일부로 1999년 5월에 울산공단 주변의 이주요구 지역인 선암·상개동, 장생포동, 용암리(오대·오천·신촌마을), 야음1동에 거주하는 300가구에 대해 설문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필자가 2000년 1월에 본 연구를 위해 여천공단 주변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상암동 등의 301가구에 대해 별도로 조사한 결과이다. 수집된 자료는 통합된 뒤 SPSS 프로그램에 의해 통계 처리되었다.

2. 공단주변의 환경악화와 초기 이주과정

1) 울산, 여수의 공단특성과 환경실태

중앙일보(1997)가 전국 73개 도시들을 대상으로 매긴 삶의 질 순위에 의하면, 울산시는 71위, 당시 여천시³⁾는 7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두 말할 것 없이 두 도시에서의 석유화학공단 입지에 따른 환경악화가 시민의 안전 및 건강생활을 위협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울산에는 울산·미포공단과 온산공단이라는 2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여수에는 여천국가산업단지가 가동되고 있다.⁴⁾ 1962년에 울산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울산·미포공단의 경우 업체수의 25%, 1974년에 비철금속제련기지로 형성된 온산공단의 경우에는 37%의 업체가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비해 1967년부터 조성된 여천공단의 입주업체들은

2) 여기에서 울산공단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과 온산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3) 기존의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은 1998년에 여수시로 통합되었다.

4) 울산·미포공단은 실수요자의 자유입지 형태로 개발되어, 토지이용도의 저하는 물론 용도지구의 무계획적 혼재를 낳았다. 온산공단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계획입지 형태로 체계적으로 개발된 편이나, 같은 시기에 조성된 안산, 창원 등에 비해 단지내 녹지면적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여천공단의 경우 1969년에 호남정유가 기공된 이후 1975년에 여천석유화학단지가 합동으로 착공되었으며, 비교적 최근인 1996년부터 단지의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동남국가관리공단(1999)과 여천공단 환경협의회(1999) 참조.

정유, 비료를 포함한 화학업종들로 100% 구성되어 있다.

<표1> 울산공단과 여천공단의 현황(1999.8 현재)

	분양면적 (천m ²)	입주업체 수(개사)	고용(명)	총생산 (억원)	업체당면적 (m ² /개사)	1명당생산 (백만원/명)	석유화학업 체수(개사)
울산공단	38,098	591	96,716	38,046	64,464	39	167
울산미포공단	26,052	442	87,158	29,927	58,941	34	110
온산공단	12,046	149	9,558	8,119	80,846	85	57
여천공단	21,041	84	12,250	11,937	250,488	97	84

출처 : 동남국가관리공단(1999)

<표1>을 보면, 울산공단의 총면적과 석유화학 업체 수는 여천공단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여천공단의 업체 당 면적과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이 울산공단 전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석유화학업이 거대한 장치산업으로서 고용 효과가 낮음을 암시한다는 점이다.

석유화학공단이 앞서 들어선 울산의 생활환경은 여수보다 빨리 악화될 수 밖에 없었다. 이미 1969년에 한국 알미늄 울산공장이 가동되자마자, 이웃한 삼산 평야의 벼들은 말라죽기 시작했다(구도완, 1996: 148). 온산공단의 고려아연, 효성알미늄 등이 세워진 1978년부터는 이진리, 원산리의 어업 피해가 발견되었으며, 1982년에는 '온산병'이라 불리는 신경통과 피부병 증세마저 생기게 되었다. 그 결과 1986년에 당시 환경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울산.미포공단과 온산공단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⁵⁾

이에 비해 여천공단 주변의 환경피해는 호남정유가 완공된 1970년대초부터 있었으나, 남해화학이 생산을 시작한 1977년에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공장으로부터 불과 10미터 떨어진 낙포리에서는 1978년 한해 동안 눈병, 피부병 환자가 708명이나 발생되어, 결국 1981년까지 주민이주가 완료되었다(구도완, 1996: 149). 그리고 1996년 당시 여천시가 한국과학기술원(KIST)에 의뢰한 '여천산단 주변마을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의 결과, 해안에서 수은이 검출되는 등 여수의 환경오염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⁶⁾ 그리하여 1996년에 여천공단은 울산에 뒤이은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추가되었다.

5) 그에 따라 취해진 특별종합대책으로는 가스상 물질과 분진에 대한 지역 배출허용 기준의 설정, 병커씨유의 황 함유량 규제, 굴뚝자동측정기의 설치, 굴뚝높이의 조정, 신규업체의 입주 제한 등이 있었다. 환경부(1999) 참조.

6) KIST의 보고서는 여천공단 앞바다에서 수은이 0.286ppb(1ppb는 1/1,000ppm)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황화수소는 기준치 0.2ppm의 19배인 3.843ppm으로, 벤젠도 최대 48,400ppt(1ppt는 1/1조ppm)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1996년 7월에 실시된 환경부의 합동조사 결과는 수은이 전혀 검출되지 않고 황화수소와 벤젠의 검출량도 각각 최대 9.768ppb, 932ppt로 훨씬 낮은 것으로 발표되었다(김법성, 1998). 하지만 국정감사의 과정에서 1996년 10월에 환경부가 시행한 3차 여천공단 오염실태 조사자료 중 벤젠, 톨루엔 등 일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측정 결과가 KIST 숫자보다 높게 나오자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조태진, 1996).

<표2> 울산과 여수의 대기오염도 현황(1998.12와 1999.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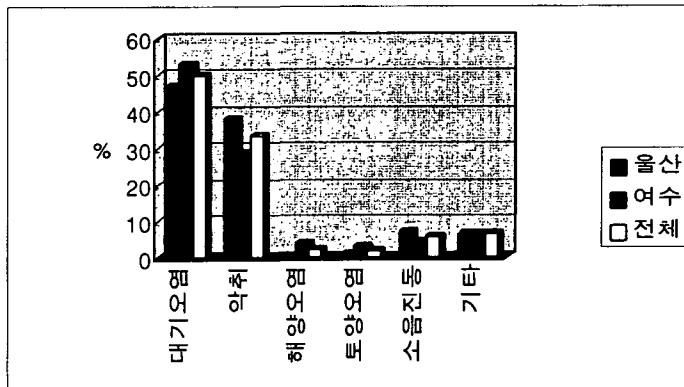
	아황산가스(SO ₂) (ppm)	먼지(TSP) (µg/m ³)	오존(O ₃) (ppm)	이산화질소(NO ₂) (ppm)	일산화탄소(CO) (ppm)
울산	0.012	65	0.017	0.023	0.8
여수	0.018	52	0.019	0.029	0.9
환경기준	0.03	150	0.06	0.05	9

주 : 울산시의 수치는 1998년 12월 현재 기준이며, 여수시의 경우 1999년 1월 현재를 기준으로 함.
출처 : 울산광역시(1999)와 여수시의회(1999).

<표2>에 의하면, 최근 울산과 여수의 개별 대기오염 물질의 분포는 모두 환경기준치를 밑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기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의 효과처럼 보이지만, 두 도시의 일반지역이 아닌 공단주변에서의 총량적인 체감오염도와는 거리가 먼 지표일 수도 있다.⁷⁾ 그 밖에 먼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도 면에서 여수가 울산에 비해 좀더 심각한 상태임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울산과 여수의 공단주변 주민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지역사회의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기오염을 손꼽고 있지만, 1/3은 악취라는 체감공해를 거론하고 있다(<그림1> 참조). 그리고 악취에 대한 응답 비율은 울산에서 좀더 높으며, 여수의 경우 해양 및 토양의 오염에 대한 지적이 약간 많다.

<그림1> 공단주변 주민의 심각한 지역사회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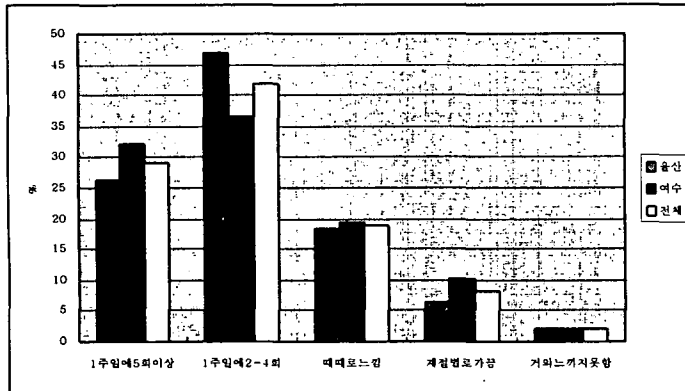


주: $X^2=17.3(p<0.05)$

출처 : 김재홍 외(1999)와 설문조사(2000).

7) 공단주변의 개별적인 대기오염도는 전체 도시의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여천공단 주변 삼일동의 아황산가스, 오존은 1998년 현재 각각 0.020ppm, 0.027ppm으로 여수시 전체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여수시의회(1999) 참조.

<그림2> 공단주변 주민이 느끼는 악취 경험의 정도



주: $X^2=8.3(p<0.1)$

출처 : <그림1>과 같음.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악취는 정신적, 생리적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메스꺼움, 두통, 식욕감퇴, 호흡곤란, 알레르기 등의 건강피해를 가져온다(한상진, 1996: 36). 조사결과에 따르면, 1주일에 5회 이상 거의 매일같이 악취를 경험하는 비율이 30%에 가깝고 1주일에 2회 이상까지 포함하면 70%의 공단주변 주민이 일상적으로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그림2> 참조).

2) 초기 이주사업의 경과

공단주변 환경악화의 가장 파국적인 결과는 더 이상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태일 것이다. 울산에서는 공단주변 주민에 대한 집단이주 사업이 울산.미포공단과 온산공단이 조성된 지 각각 19년, 7년이 지난 1981년에 이미 결정되었다. 이에 비해 여수의 경우 공장 입주에 따른 부분적인 개별이주⁸⁾말고는, 여천공단이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뒤에야 환경피해 주민의 집단이주가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는 울산공단을 중심으로 초기 이주사업의 과정과 문제점을 살피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검토가 갖는 의의는 이주사업의 경험없이 이주요구 운동을 벌이고 있는 여천공단 주변 주민들에게 타산지석의 예를 보여준다는 데 있다.

울산공단 주변 7,467세대를 대상으로 한 집단이주는 온산병이 사회문제로 널리 알려진 1985년에 사업시행이 공고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⁹⁾ 여기에 포함된 지역은 울산.미포공단의 여천, 매암, 부곡, 황성, 용연, 선암동 등 6개 동이며, 온산공단의 당월리, 이진리, 우봉리 등 15개 마을이었다(김재홍 외, 1999: 57). 1998년 말 현재 이 가운데 이주를 완료한 세대는 전체의 93.3%인 6,970세대이고, 6.7%인 497세대만 아직 이주를 하지 않고

8) 그러한 사례로 대표적인 것은 1981년에 시행된 남해화학 주변 낙포리 주민 187 세대에 대한 이주사업이었다. 이 때의 이주보상은 토지비용만 국가가 지불하고, 나머지 건물비용, 간접보상, 이주대책비 등을 기업이 모두 부담했다는 특징이 있다. 조길환 외(1998: 557) 참조.

9) 물론 이렇게 이주사업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4년만에 시행된 데에는 온산을 중심으로 한 공단주변 주민의 이주요구 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구도완(1996: 244-267) 참조.

있다.¹⁰⁾ 어쨌든 시행 후 15년을 경과한 울산공단 주변 주민에 대한 1차 이주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표3> 울산공단 초기 이주사업의 비용 내역(1985-99)

단위 : 백만원(%)

국비	지방비	기업체 부담	주민 부담	계
176,454(44.9)	62,964(16.0)	37,700(9.6)	116,084(29.5)	393,202(100.0)

출처 : 울산광역시(1999).

이주사업의 방식을 보면 토지, 건물의 보상은 중앙정부가, 이주택지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영업권에 대한 간접보상비는 기업이 감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밖에 주택 건축 등의 나머지 비용은 주민 스스로의 부담으로 남겨졌다. 한편 1999년까지의 사업비 조성내역을 볼 때(<표3> 참조), 국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주민부담금이 약 30%인 반면 기업체 부담금은 10%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애초에 울산공단 주변 이주사업의 결정은 환경피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보다는, 울산을 순시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로부터 이 사업의 배경에는 공단주변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외에 공단 부지의 추가 확보라는 의도 또한 깔려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¹¹⁾ 이러한 정책 기조는 주민이 이주한 곳에 새로운 공장을 끌어들이 장기적으로는 총량적인 환경악화를 가중시킨 것으로 비판될 수 있다.¹²⁾

1차 이주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은 <표3>에서 보듯이 영업권 보상과 전업대책을 위한 기업의 부담 몫이 너무 미약했다는 사실이다. 공업도시 환경악화의 원인제공자인 제조업체는 공단주변 주민에 대한 간접보상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환경보전에 이윤을 환원시킬 책임이 있다. 하지만 공장 때문에 생계터전인 논밭과 바다를 떠날 수 밖에 없었던 환경이주민에게조차 기업의 보상액은 새로운 정착지에서 생업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¹³⁾

10) 이들 미이주세대 중 307세대는 이미 보상을 받은 상태이고, 190세대만 보상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상금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190세대는 울산공단 112세대와 온산공단 78세대이며, 주거보유 상태로 보면 가구주 69세대, 세입자 121세대로 구성되어 있다(울산광역시. 1999).

11) 김재홍 외(1999)의 연구에서 울산의 초기 이주사업을 경험한 100가구에 대해 사업의 시행 이유를 물어본 결과, 가장 많은 47.5%는 기업의 공장부지 확보 목적이라고 느끼고 있고 주민의 요구라는 응답은 27.9%로 상대적으로 소수임을 알 수 있다.

12) 1984년 당시 울산공단의 이주문제에 관여한 공해문제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이러한 무분별한 공해대책이 여타 공업단지에서도 계속된다면 전국토의 총오염화만 가속화될 것이다.... 무조건 집단이주를 시킬 것이 아니라 공해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인식이 이미 나타나 있다. 구도완(1996: 254) 참조.

13) 울산에서 초기 이주사업을 경험한 100가구에 대해 사업의 효과를 재산가치와 고용, 건강 및 환경, 주거지의 공동체성과 편리성 등의 측면에서 설문한 결과, 가장 나빠졌다고 느끼는 항목은 일자리 여건(-0.94점)이며 그 다음은 재산가치의 변동(-0.78점) 등으로 집계된다. 또한 이주사업의 분야별 불만족 정도는 세입자 대책과 영업권 간접보상에서 가장 높았다. 김재홍 외(1999) 참조.

3. 공단주변 주민의 환경을 둘러싼 태도

1) 공단주변 주민의 일반적 특성

울산공단 주변에서 초기 이주 때 제외된 주민들은 석유화학공단 인근의 장생포동 102세대, 선암·상개동 333세대, 용암리 197세대, 온산공단 인근의 산성마을 39세대 등 모두 671세대이다(울산광역시, 1999: 198). 이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민고층처리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이주대책 수립의 시행 권고를 얻어내는 등 활발한 이주요구 운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환경부가 1998년 5월 아황산가스, 불화수소 등 오염물질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울산공단 주변의 이주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고 회신한 이후, 이주요구의 강도는 다소 주춤해진 상태이다. 그런 가운데 1999년 4월 기존에 추가이주 요구가 없었던 야음1동 주민 570명까지 이주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서, 울산공단 주변 주민의 이주요구 운동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한편 여수공단 주변의 이주요구 주민들은 주삼동 935세대, 삼일동 2,182세대, 묘도동 476세대, 상암동 911세대 등 모두 4,504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의 이주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1996년 7월에 KIST의 연구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묘도동과 상암동 주민을 중심으로 이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집단시위를 벌이면서부터이다(조태진, 1996: 54). 이와 아울러 여수의 18개 사회운동단체들이 참여한 '여천공단 환경문제 시민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즉각 이주와 환경복원 비용의 예산 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1999년에 '여천산단 주변마을 이주계획'이 확정되었는데, 2000-6년의 7년에 걸쳐 월하동, 평여동, 중흥동(두암, 중촌), 적량, 주삼동 일원의 1,671세대를 대상으로 이주를 추진하며 철거지역은 국가산업단지로 추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여천공단 환경협의회, 1999). 2000년에는 우선 용역설계비 13억 5,400만원으로 산업단지개발 실시설계가 시행될 예정이다.¹⁴⁾

그러면 위의 이주요구 주민을 모집단으로 한 공단주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성별 구성 가운데 남성의 비율은 울산 43.3%, 여수 49%로 비슷하다. 연령분포는 여수에서 40대 이상의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되며, 교육수준은 울산에서 고학력층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직업의 경우 여천공단 주변에서 농수산업, 기능공 및 막노동, 무직의 비율이 좀더 높고, 울산공단 주변에서는 전업주부, 사무기술직, 기타(전문관리직, 학생 등)가 약간 많음을 알 수 있다(<표4> 참조).

다음으로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울산의 경우 상 3.0%, 중 48.0%, 하 49.0%인 반면에, 여수에서는 각각 2.1%, 72.9%, 25.0%로 분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울산공단 주변 주민들이 스스로를 하류층으로 여기는 경향이 뚜렷한데, 이는 주거형태의 불안정성과 연관된다고 추정된다. 여천공단 주변 주민의 자가소유율은 84.6%인데 비해, 울산에서 그 비율은 67.0%에 그치며 월세 형태도 12.7%로 꽤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주주택의 유형도 여수에서는 91.9%가 단독주택인 데 반해, 울산은 단독주택 62.0%, 점포 겸 주택 14.7%, 아파트 12.0%, 연립 및 다세대 11.3%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14) 여수시(2000)의 자료에 의하면, 여천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의 사업비는 2,871억원이며 그 중 1,613억원은 중앙정부, 852억원은 여수시, 406억원은 입주업체가 부담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1998년에 실시된 이주대책 기본계획 설계용역에 의거하여 1999년 6월 총리실 주관 관련 5개 부처 차관회의에서 이주사업이 결정되었고 그 해 7월에는 건설교통부를 통해 용역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되었다.

<표4> 공단주변 주민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분포

단위 : %(명)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연령	울산	19.3	23.7	18.3	11.7	27.0	100.0(300)		
	여수	5.6	14.6	22.3	21.3	36.2	100.0(301)		
	전체	12.5	19.1	20.3	16.5	31.6	100.0(601)		
		무학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중퇴 이상	계		
교육 수준	울산	15.0	16.0	12.3	40.7	16.0	100.0(300)		
	여수	8.5	37.5	12.3	30.0	11.6	100.0(293)		
	전체	11.8	26.6	12.3	35.4	13.8	100.0(593)		
		농수산업	판매서 비스직	전업주 부	기능공,막 노동	사무기 술직	무직	기타	계
직업	울산	14.0	21.0	22.3	6.0	13.3	13.0	10.3	100.0(300)
	여수	29.1	20.5	19.2	8.3	2.4	15.1	5.4	100.0(292)
	전체	21.5	20.8	20.8	7.1	7.9	14.0	8.0	100.0(592)

주 : 연령은 $X^2=47.5(p<0.01)$, 교육수준은 $X^2=37.9(p<0.01)$, 직업은 $X^2=46.7(p<0.01)$ 임.

출처 : <그림1>과 같음.

2) 환경의식과 일상적 환경행동

이제 공단주변 주민의 이주요구와 관련된 환경운동을 본격적으로 살피기에 앞서, 일상적인 환경의식과 환경행태가 어떠한지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환경보도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절반인 49.6%가 늘 관심 있게 보고 있어 환경문제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늘 관심 있게 보는 비율은 여수(54.2%)가 울산(45%)보다 높으나 대충 보는 비율까지 합치면 울산과 여수가 각각 85.3%와 86.8%로 엇비슷한 수준이다 ($X^2=7.5, p<0.1$).

이와 함께 공단주변 주민의 환경에 대한 가치관은 환경관리주의, 생태주의, 환경정의론 가운데 어떤 입장에 가까운지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¹⁵⁾ <표5>를 보면, 국제적 환경정의론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그 뒤로는 국내적 환경정의론, 생태주의, 환경관리주의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또 여천공단에서는 환경정의론, 생태주의에 대한 지지 정도가 더 높고, 환경관리주의의 경우 통계적 의미는 없지만 울산공단에서 약간 더 선호되고 있다.¹⁶⁾ 즉 공단주변 주민의 환경가치관은 환경정의론에 가장 기울어져 있으며, 그 정도는 여수에서 약간 더 두드러지는 셈이다. 이는 울산공단과 여천공단의 주민환경운동이 환경정의의 이념 아래 조직화될만한 의식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암시한다.

15) 환경가치관의 점수는 적극 찬성 2점, 찬성하는 편 1점, 반대하는 편 -1점, 적극 반대 -2점의 4점 척도를 평균한 것이다. 그리고 환경관리주의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를, 생태주의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늦출 수 있다'를, 환경정의론과 관련하여 국내적 차원에서는 '못사는 사람이 잘사는 사람보다 환경문제로 더 피해를 본다'를, 국제적 차원에서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진국은 후진국을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를 지표로 삼았다.

16) 그 밖에 '원자력발전은 오염발생이 없는 깨끗한 전력생산방식이다'라는 지표를 통해 핵발전의 청정도 의식을 측정된 결과, 울산이 -0.85점으로 여수의 -0.48점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계산된다.

<표5> 공단주변 주민의 환경가치관

	환경관리주의	생태주의	국내적 환경정의론	국제적 환경정의론
울산	0.16	-0.11	0.81	0.90
여수	0.10	0.75	1.19	1.35
(F값)	(0.37)	(76.49**)	(18.86**)	(35.12**)
전체	0.13	0.32	1.00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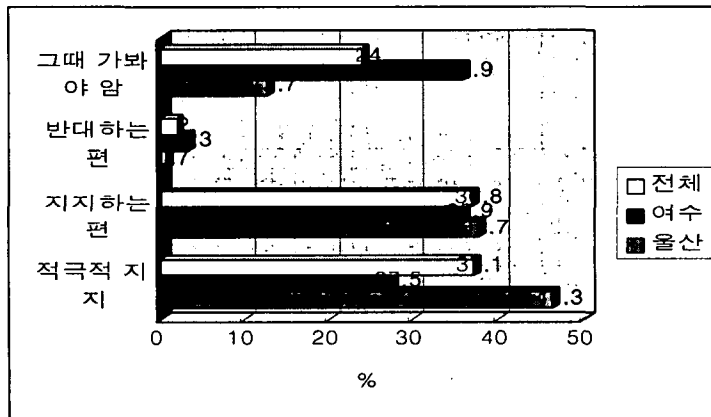
주 : ** p<0.01.

출처 : <그림1>과 같음.

또한 환경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정당이 창당될 경우의 지지도를 살펴 보았다(<그림3> 참조).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지지가 37.1%이고 지지하는 편이라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73.9%에 이르는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지지의 강도는 공단의 조성 역사와 환경정치의 연륜이 좀더 긴 울산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그렇다면 이주를 요구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공단주변 주민들은 재활용품 및 무공해 농산물의 구입,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 수거 등과 같은 일상적인 환경행동에 얼마나 적극적일까? <표6>에서 보듯이 재활용품의 구입경험은 자주 구입 2점, 가끔 구입 1점, 구입한 적 없음 0점으로 계산할 때 0.78점이며, 일반농산물보다 비싼 무공해 농산물의 구입 여부는 항상 그렇다 2점, 그런 편이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1점, 항상 그렇지 않다 -2점을 매길 때 -0.1점으로 집계된다. 이에 비해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수거 참여도는 좀더 활발한데, 철저히 참여 2점, 대충 참여 1점, 별로 참여 않음 -1점, 전혀 참여 않음 -2점으로 집계할 경우 평균 점수가 1.3점으로 꽤 큰 셈이다.

<그림3> 공단주변 주민의 환경정당에 대한 태도



주: $X^2=52.0(p<0.01)$

출처 : <그림1>과 같음.

<표6> 공단주변 주민의 환경행동

	재활용품 구입경험	일반 농산물보다 비싼 무공해 농산물 구입여부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참여정도
울산 여수 (F값)	0.68 0.88 (16.42**)	-0.46 0.26 (59.17**)	2.24 2.49 (18.81**)
전체	0.78	-0.10	2.37

주 : ** p<0.01.

출처 : <그림1>과 같음.

이로부터 공단주변 주민은 경제적 추가부담이 있는 환경친화적 행동보다는 쓰레기 분리수거처럼 부담없는 환경행동에 훨씬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¹⁷⁾ 또한 지역별로는 하류층에로의 정체성이 높고 생태주의 의식이 비교적 낮은 울산에서 무공해 농산물 구입과 같은 일상적 환경행동의 정도가 조금 뒤쳐짐을 발견할 수 있다.

4. 공단주변 이주요구 운동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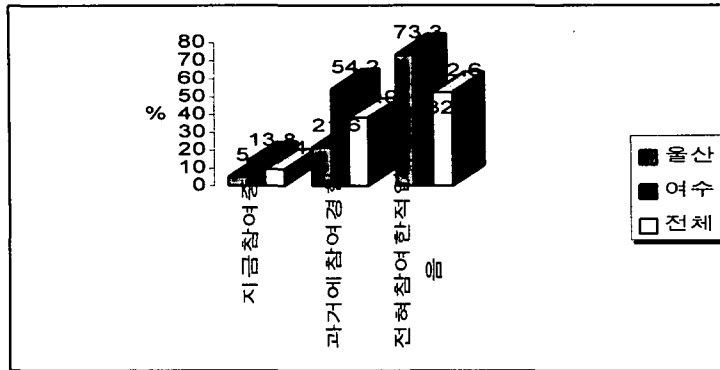
1) 공단주변 주민의 환경운동 참여도

울산에서는 여수보다 이주요구 운동을 포함한 환경운동이 좀더 일찍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온산공단의 주민환경운동을 보면, 이미 1982년에 온산면 이주추진협의회가 결성되었고 1986년에는 이주보상협의회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이 전개되어 왔다(구도완, 1996: 246). 전문환경운동의 측면에서도 1989년에 준비위원회로 출범한 울산공해추방운동연합이 1991년에 정식으로 발족되었으며, 1993년에는 울산환경운동연합으로 탈바꿈하여 조직력을 강화시켜 왔다.

한편 여수의 환경운동은 1995년의 시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와 1996년의 여천공단 환경피해 보도를 즈음하여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전문환경운동단체와 주민환경운동단체 26개의 협의체인 '여수·여천 해양오염 시민대책본부'가 1995년 7월에 구성되었으며(여수·여천 해양오염 시민대책본부, 1996), KIST 조사결과에 대한 환경부의 축소 의도에 대응하여 1996년 8월에 결성된 '여천공단 환경문제 시민대책본부'에는 18개 단체가 참여했다. 그 결과 1996년 12월에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조직되었고, 1998년 12월부터는 지방의제 작성을 위한 '아름다운 여수21' 추진협의회가 활동을 개시했다.

17) 김재홍 외(1999)가 울산의 일반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같은 설문항목의 평균점수를 계산한 결과, 무공해 농산물 구입은 0.36점으로 공단주변 주민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는 공단 주민과 비슷한 1.36점으로 나타난다.

<그림4> 공단주변 주민의 환경운동조직 참여도



주: $X^2=101.6(p<0.01)$

출처 : <그림1>과 같음.

그러면 공단주변에서 환경정의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바탕이 되는 주민들의 환경운동 참여도를 살펴기로 한다. 먼저 지역사회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돈을 받지 않고 환경감시에 나설 의향에 대해 알아 보자. 전체적으로 그러한 자원봉사 의지가 있는 비율은 48.8%로 절반 정도이며, 여수가 56.5%로 울산의 41.3%에 비해 높은 편이다($X^2=13.6, p<0.01$).

동네의 공해주민대책회의나 환경운동연합 등 전문환경운동단체를 막론하고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모임에 참여해 본 정도 또한 여천공단 주변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4> 참조). 이 같은 환경운동조직에 지금 참여하거나 과거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의 강도를 조사해 보아도, 적극적 참여의 비율은 여수가 89%(매우 적극적 50.5%, 약간 적극적 38.5%)로 울산의 62.1%(매우 적극적 20.3%, 약간 적극적 41.8%)보다 크다($X^2=43.0, p<0.01$).

이와 관련하여 동네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믿을만한 개인, 조직 등을 복수로 선택케 한 결과, 주민들로 구성되는 단체가 가장 높고 전문적인 환경운동단체, 마을대표 등이 그 다음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표7> 참조). 여수의 경우 주민환경단체와 마을대표에 대한 신뢰의 빈도가 높은 데 반해, 울산에서는 주민환경단체와 전문환경운동조직을 손꼽는 정도가 엇비슷하다. 눈에 띄는 것은 울산공단 주변에서 신뢰할만한 행위자가 없다는 반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오래된 이주 요구가 관철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 보여진다.

<표7> 공단주변 주민의 믿을만한 행위자 분포(복수응답)

단위 : %(명)

	지역 국회의원	시,구,군 의회의원	민선자치 단체장	동장 및 읍장 등 공무원	통반장, 이장 등 마을대표	주민들로 구성되 는 단체	교수 등 관계 전문가	환경운 동단체	종교인 등 지역 원로	없다	계
울산	14.1	18.6	17.5	12.7	25.4	54.0	24.1	52.2	2.7	78.0	49.6(291)
여수	7.1	15.2	18.9	35.5	64.5	70.6	1.4	42.2	2.0	10.1	50.4(296)
전체	10.6	16.9	18.2	24.2	45.1	62.4	12.6	47.2	2.4	43.8	100.0(587)

출처 : <그림1>과 같음.

아울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운동 수단의 사용 의지에 대해 서명운동, 항의집회, 가두시위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자. 적극적 참가 3점, 소극적 참가 2점, 거의 참여하지 않음 1점, 전혀 참여하지 않음 0점을 주어 계산해 볼 때, 손쉬운 방식의 서명운동이 가장 높은 점수이고 헌신성이 요구되는 가두시위가 비교적 낮은 점수를 얻고 있다(<표8> 참조). 지역별로 보면 <그림4>에서 환경운동조직에 대한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여천공단 주변 주민에게서 서명운동은 물론, 항의집회, 가두시위의 빈도가 좀더 높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8> 공단주변 주민의 환경운동 수단별 채택 정도

	서명운동	항의집회	가두시위
울산	2.17	1.50	1.24
여수	2.80	2.54	2.42
(F값)	(89.83**)	(204.59**)	(234.82**)
전체	2.49	2.02	1.83

주 :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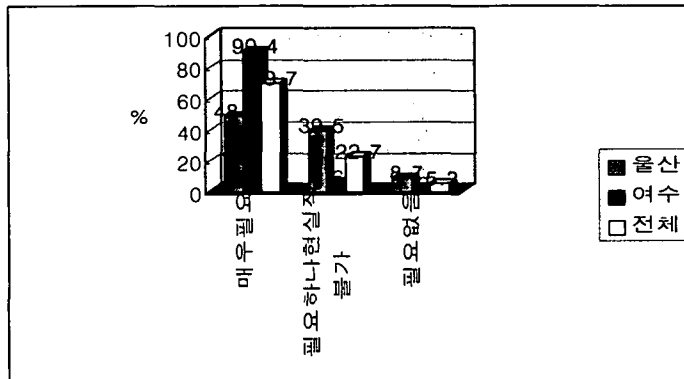
출처 : <그림1>과 같음.

그러나 환경운동 참여도를 둘러싼 울산과 여수의 차이는 이주요구의 시점에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나치게 과장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수에 비해 이주요구 운동이 소강상태인 울산공단 주변의 주민들 또한 환경정당의 필요성 인식이나 전문환경운동단체에 대한 신뢰 정도 등이 낮지 않기 때문이다. 즉 조사할 당시 여천공단보다 이주요구가 뚜렷이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은 탓이지, 울산공단 주변의 주민들이 환경운동에 대해 특별히 거부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개별 이익을 중심으로 한 주민환경조직의 요구와 이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전체 이익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환경정의운동의 조직적, 정치적 틀이 아직 미비한 것이 더욱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이주사업에 대한 요구상황

지금까지 울산과 여수에서의 이주요구 운동의 배경으로서, 울산공단 초기 이주사업의 과정과 두 지역의 공단주변에서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환경의식과 일상적 환경행동, 전반적인 환경운동에 대한 참여도 등을 비교해 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의 이주요구가 초기 이주사업의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울산과 여수의 공단주변에서 이주사업에 대한 요구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밝히기로 한다.

<그림5> 공단주변 주민의 이주사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



주: $X^2=125.1(p<0.01)$

출처 : <그림1>과 같음.

우선 전체적으로 주민의 2/3 이상은 집단이주사업을 매우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23% 가량이 사업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그림5> 참조). 반면에 이주가 필요없다는 응답은 5% 남짓에 그쳐, 대다수 주민들이 이주의 필요성에 공감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이주사업에 대한 요구는 현재 시행이 임박해 있는 여천공단에서 더욱 높게 나타난다.¹⁸⁾

한편 이주사업이 아닌 현재 거주지의 환경개선과 삶의 질 제고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 이에 관련된 투자가 늘어날 경우의 집단이주에 대한 견해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환경오염방지나 생활편의시설을 위한 투자가 증대되어도 각각 73.1%, 74.7%의 주민은 여전히 이주를 요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한 요구의 비율 역시 여수가 각각 90.6%, 91.9%로 좀더 높지만, 울산공단 주변에서도 각각 55.5%, 57.5%라는 과반수는 이주를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이주사업의 전개방향에 관해서도 늦더라도 주민의 요구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절반을 웃돌고 있다(<표9> 참조). 여기서도 결국 시행되지 못하리라는 부정적 견해는 울산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 그 주된 이유는 이주불가라는 환경부의 정책 기조가 주민들에게 이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 풀

18) 이주사업의 근황에 대한 청취 정도는 울산의 경우 자주 접함 12.7%, 가끔씩 들음 45.1%, 거의 접하지 못함 24.7%, 전혀 접하지 못함 17.4%이고 여수의 경우 각각 14%, 55%, 25%, 6%여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한 근황의 청취 경로를 보면, 울산이 언론매체 70%, 지역주민모임 25%, 기타 5%이며 여수가 각각 56.5%, 40.1%, 3.4%로 울산공단 주변 주민이 언론매체에 의지하여 이주사업 관련 정보를 얻는 비율이 더 높다.

이될 수 있다.

<표9> 향후 이주사업에 대한 전망

단위 : %(명)

	주민의 요구대로 시행될 것	예산 때문에 늦더라도 결국 시행될 것	주변지역이 개발 안되면 시행 안될 것	어떤 형태로든 시행되지 못할 것	기타	계
울산 여수	1.7 13.0	37.5 53.8	17.7 13.4	43.1 15.1	0.0 4.7	100.0(299) 100.0(299)
전체	7.4	45.7	15.6	29.1	2.3	100.0(598)

주: $X^2=91.4(p<0.01)$

출처 : <그림1>과 같음.

요컨대 울산공단 주변 주민 가운데 약 40-45% 가량은 이주대책보다 현 상태 환경개선과 생활편익의 증진을 원하는 셈이다. 끝까지 이주를 요구하는 나머지 주민들 역시 이주하기 전까지 환경악화를 저감시키는 데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울산의 이주요구 운동은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삶의 질 보장운동과 결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략은 이주만을 능사로 삼아 환경파괴가 가중되었던 1차 이주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는 세심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⁹⁾

끝으로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주된 관심사와 비용조달에 관한 의식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먼저 이주사업에서 고려되어야 할 측면으로 가장 많은 49.8%(울산 45.5%, 여수 52.4%)가 토지, 건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손꼽고 있으며, 16.3%(울산 9.9%, 여수 20%)는 직업알선 등 전업생활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주택지의 적절한 입지가 13.3%(울산 20.7%, 여수 9%)를 차지하고, 농어업 등 영업권의 적절한 보상이 10.9%(울산 9.9%, 여수 11.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기존 재산권에 대한 보상금액이 최대의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이주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여천공단의 경우 일자리 마련 이외에 못지 않은 요구사항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울산공단 초기 이주사업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철거이주민의 생계를 보장할만한 전업대책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²⁰⁾ 그런 흐름에서 이주대상 주민의 직업알선에 대한 요구는 여천공단에서의 집단이주가 울산의 1차 이주사업에서 빠뜨린 고용 쟁점을 포괄하여 실시되게 만드는 매개 고리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여수의 이주사업 요구 주민들이 15년 전의 이주사업 방식을 우회해 가려는 움직임은 사업비용 부담에 관한 조사결과에서도 감지된다(<표10> 참조). 왜냐하면 국가공단을 조성한 중앙정부 외에 환경악화의 원인제공자인 기업에게 사업비를 더 많이 부담시키려는 의식이 꽤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표3>에서 지적한대로 초기 이주사업 당시 기업체의 부담이 너무 미미했다고 본다면, 이러

19) 여수의 경우에도 전문환경운동단체인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천공단의 문제를 단순히 주민이주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박계성(2000)은 “공단오염은 인근 주민만이 아니라 공장 노동자를 포함하는 공단지역 전체와 여수지역 전체의 문제이다. 때문에 여천공단의 문제는 주변 마을을 포기하고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공단지역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건설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20) 그 결과 1998년 현재 울산·미포공단 주변 475세대, 온산공단 주변 286세대 등 761세대는 이미 보상을 받고 이주한 뒤에도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어 원래의 공단 주변으로 돌아와 어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들 세대는 2000년까지 다시 철거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1998) 참조.

한 요구는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정당한 운동의 방향이라 여겨진다.

<표10> 이주사업 요구 주민의 사업비용 부담에 관한 의식

단위 : %(명)

	중앙정부가 가장 많이 부담	기업이 가장 많이 부담	지자체가 가장 많이 부담	중앙정부, 기업, 지자체 모두 같이 부담	기타	계
울산 여수	23.1 42.2	21.5 36.0	5.0 0.9	49.6 17.1	0.8 3.8	100.0(121) 100.0(211)
전체	35.2	30.7	2.4	28.9	2.7	100.0(332)

주: $X^2=49.0(p<0.01)$

출처 : <그림1>과 같음.

5. 맺음말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유의미한 분석 결과들을 요약하고, 그것의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모아 보기로 한다. 이주를 요구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울산공단과 여천공단의 주민들은 환경정의 가치관에 가장 친화적이며, 추가비용이 드는 무공해 농산물의 소비보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일상적 환경행동을 좀더 많이 실천하고 있다. 전반적인 환경운동에 대한 참여도는 여수가 울산보다 좀더 앞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울산공단 주변 주민이 환경운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더 나아가 이주요구를 둘러싸고도 현재 이주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여천공단 주변 주민의 의지가 비교적 강한 편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도시 전체의 총량적 환경악화가 불가피한 잘못된 이주정책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현 상태 삶의 질 개선을 아울러 중시하는 울산 주민의 태도도 높여 평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수에서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고용대책과 기업부담 강화의 요구는 법적 근거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해 온 이주사업의 근본적 개선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이주요구를 둘러싼 환경운동이나 환경정책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환경정의운동은 해당 이주요구 운동조직과 전문환경운동단체의 연대를 통해 환경악화로 거주지가 철거된 곳에 신규 공장을 입주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이전적지를 차단 녹지로 보전하는 대안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제도요구운동과 관련해서는, 공단주변 주민의 삶의 질 확보라는 취지에서 환경피해 주민의 고용대책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피해보상법'을 시급히 제정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그리하여 울산과 여천의 공단주변 환경개선 투자나 주민 이주사업 등도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체계적으로 규정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러한 법제화 이전이라도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5조, 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책무와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 책임에 의거하여, 환경피해 주민에 대한 기업의 보상 부담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울산, 여수 등의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규정된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케 하고, 해당 공

단에서 징수되는 배출부과금이 주변의 환경개선에 재투자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공장에 대한 벌금 성격의 배출부과금은 ‘부담금 발생지역 환경개선 우선 원칙’에 의거하여 피해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도완(1996),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 문학과 지성사.
- 김범성(1998). “대중적 과학기술논쟁의 한 양상-여천공단 환경평가를 둘러싼 논란을 중심으로,” 다른과학, 제4호.
- 동남국가관리공단(1999), 현황자료.
- 김재홍·정준금·한상진·김성률·이충렬(1999), 울산지역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시민 의사 반영과 환경민원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및 공단지원 주민건강 조사연구,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1차년도 연구사업과제 결과보고서.
- 박계성(2000). “성장의 신화 뒤에 감춰진 공해의 땅, 여천 석유화학공단,” 여수환경운동연합·울산환경운동연합. 여수반도 환경기행 및 공단환경문제 토론회 자료집.
- 여수시(2000), 여천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
- 여수시의회(1999), 여천국가산단 환경실태과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 여수·여천 해양오염 시민대책본부(1996), 여수·여천 해양오염 시민대책본부 활동보고서.
- 여천공단 환경협의회(1999), 여천산단 일반환경 현황.
- 울산광역시(1998), 환경오염이주대책사업.
- _____ (1999), 환경백서.
- 이득연(1998), 환경운동의 사회학, 민영사.
- 이창걸(1996), “공단지원 주민의 공해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 정준금·신연재·최병철·한상진(1999), 환경과 사회, 대영문화사.
- 조길환·김영곤(1998), “여수 국가산단내의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연구,” 여수대 논문집, 제12집 2권.
- 조태진(1996), “여천공단 환경문제의 전개과정과 새로운 전략,” 환경과 생명, 겨울호.
- 중앙일보(1997), 6월 26일자.
- 한상진(1996), “울산공단 환경문제의 구조와 전망,” 환경과 생명, 겨울호.
- 환경부(1999), 환경백서.